

‘21兆’ 사우디 원전 수주戰... 선봉에 선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우디, 예비사업자 5개 국가 선정
김종갑 사장, 알 술탄 원장과 면담
현지화·인력양성 등 이행방안 수립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우디아라비아가 총 21조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2기를 지을 예비사업자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를 선정하면서 한국전력이 적극적인 수주전에 나섰다.

한국전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알 술탄(Dr. Al-sultan)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신규 원전건설사업 수주활동을 전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종갑 사장은 알 술탄 원장과 만나 신규원전 사업수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한전의 사업수행 준비현황을 설명하고 원자력 및 신재생 분야에서의 양사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은 최근 한전이 2800MW 규모의 사우디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예비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쟁국과의 치열한 수주전에서 우위를 잡기 위한 행보다.

앞서 지난달 한국전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규 원전건설의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이 예비 사업자로 선정, 향후 사업조건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우디 신규원전사업은 세계원전시장에서 2009년 UAE원전사업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왼쪽부터)태중훈 한전 해외원전사업처장, 김종갑 한전 사장이 알술탄 K.A.CARE 원장과 사우디 신규 원전 사업수주를 위해 양사간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전력

선정한다.

사우디측은 당초 입찰 1단계에서 2~3배수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입찰국들이 사우디측 최소 요구조건을 만족했다고 판단, 5개국 모두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사업자가 발표된 이후 한전은 정부와 함께 발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해 2단계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참석하에 한전 서울아트센터내

사우디원전지원센터 개소식을 거행하고 원전산업계 대표들과 함께 원전수출전략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사우디원전사업 수주기반을 다지고자 현지화, 인력양성 등 사우디측의 핵심 관심분야에서의 실질적 이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 사우디 현지 로드쇼를 개최하고 양국 기업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현지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본격적 입찰

2단계 시작에 따라 앞으로 사업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우디 원전사업 수주를 통해 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신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원전산업계의 역량이 결집된 Team Korea 체제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 또한 사우디 원전사업 수주를 중동내 영향력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삼기위해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경쟁국들과 치열한 수주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경험,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경제적인 건설비 등이 경쟁국 대비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전은 이를 앞세워 사우디 원전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사우디는 ‘비전 2030’ 경제·사회 개혁 계획 하에 90%에 이르는 석유 의존도를 약 5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하는 등 중장기 신성장동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는 2030년까지 2.8GW 규모의 원전 2기를 최초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뿌리업계 맞춤 ‘최저임금’ 대책 지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부산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주조업체)인 터보파워텍(주)을 방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업계 현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터보파워텍(주)은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운영 등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해 조선기자재 생산 업체에서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소재기업으로 사업 전환에 성공한 업체다. 발전터빈 부품을 국산화해 국내 발전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너럴모터스(GE), 미쓰비시, 히타치 등 글로벌 기업 수출에 성공한 업체다.

이날 정형호 터보파워텍(주)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인 인건비를 상승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현재 노무사·컨설팅업체 등에 자문해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300인 미만기업으로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백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지만 제도 이행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가 예상되는 뿌리기업, 유통, 섬유업종에 대해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신용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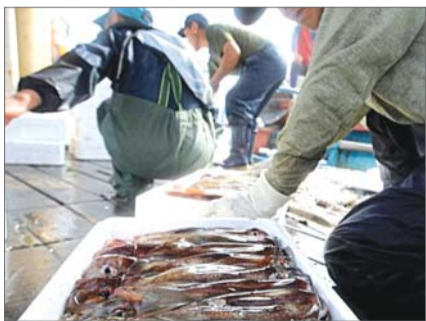
‘金징어’ 시대... 태평양서 새 어장 찾는다

최근 어획량 감소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오징어가 ‘금(金)징어’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새로운 오징어 어장 찾기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생산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태평양 해역에서 오징어 어장 자원조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와 포클랜드 수역 등 주요 어장에서 오징어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원양산 오징어의 경우 2017년 생산량이 4만6000톤으로 2015년 생산량의 31%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근해산 오징어도 2017년 생산량이 8만7000톤으로 1990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원양산 오징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남서대서양 포클랜드 수역에서 3만1000톤을 어획하는 수준에 머물러 전년보다 생산량이 27% 감소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국내 시장에서는 오징



지난달 18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에 오징어 위판이 시작된 모습. /연합뉴스

어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냉동오징어 1kg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2016년 4577원eso 올해 8410원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의 대상지로 남동태평양(FAO87해구)으로 선정하고, 조사선 2척을 투입해 아메리카 대왕 오징어(Dosidicus gigas) 어장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최신용기자

5억 불 수출효자 ‘김’, 과잉생산에 발등 찍힐라

김 재고 증가... 평년 비 53.6% 많아
“2019년산 김 과잉 대책 세워야” 지적

지난해 사상 첫 수출 5억 달러를 돌파하며 대표적인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한 ‘김’이 최근 무분별한 생산으로 재고가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 산업은 2017년 농수산식품 가운데 참치에 이어 수출 2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현재 정부는 2024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김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KMI에 따르면 최근 호황을 보이던 김산업이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국내 김 재고량은 7420만 속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8.7%, 평년에 비해서는 53.6%나 많은 양이다.

KMI는 이러한 재고 증가를 2018년산 김이 작년산에 비해 2,400만 속이나 늘면서 과잉생산 되었기 때문으로 과잉생산의 원인은 수출확대로 인한 양식면허 증가와 불법 양식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었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생산 과잉과는 반대로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은 작년 동기기간에 비해 247만 속이 증가하긴 했지만 생산량 증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국내 김 소비가 일정 수준에 정체돼있는 상황에서 작년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수출 실적이 작년보다 2000만 속가량이 더 높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높은 김 재고 수준을 지속할 경우 김 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재고 소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2019년산 김 생산이 또 다시 과잉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불법 양식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김 생산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어장정비 노력에도 2018년 기준 김의 불법시설은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불법시설은 김의 과잉생산을 가중시키며, 양식면허(준법시설)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정부의 수급정책 실효



성을 낮추기 때문에 정비돼야 한다는 게 KMI의 지적이다.

다음으로 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김 생산자, 정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가칭)김 수급조절 위원회’를 발족하고 적정시설, 과잉생산방지, 재고소진 등의 수급조절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의 김 작황, 생산량 등의 수급상황을 비롯해 태국, 미국, 대만 등 주요수출대상국의 수요변화 등을 체크해 국의 수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

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 성과 특특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 신중년 퇴직자가 지역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기업, 공공·행정기관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는 신청자가 1만1000여 명에 육박했다. 특히 올 7월 기준 5669명이 참여해 전년 동월 대비 참여인원이 32.2% 증가했다.

이 같은 호응 속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자체들은 지역 내

신중년 전문인력의 경험을 복지, 교육, 생활서비스 등 지역 현안과 접목하며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노동부는 신 중년들의 지역 사회공헌 참여가 더욱 확산되도록 이달 6일 사회공헌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경선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국장은 “퇴직자들이 개인의 경력에 맞는 지역 사회공헌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기자